

# 北 비핵화 선언 후 첫 ARF

### 외장성명 '북핵' 문안 주목... 올해 '완전한 비핵화' 지지 담길 듯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 처음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는 아세안 10개국과 북핵 6차회담 당사국 등 총 27개 나라가 참여하는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다.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 테러리스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북한은 2000년 제7차 ARF부터 참여했다. 이후 2007년까지 남북은 ARF를 계기로 별도의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해왔으나, 2008년 ARF 개최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경색됐다.

이후 ARF는 남북 대결의 장이 됐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역제약 차원의 핵무력 고도화의 불가피성을 강변했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ARF는 중립적이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의 협의체다. 이에 외장성명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ARF 의장국이었던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명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년도 의장성명에서 안보리 결의 준수를 '독려'했던 것보다 엄중한 인식이 담겼다는 게 당시 외교 당국의 평가였다.

당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포함한 대표단은 ARF 종료 후 라오스에 남아 의장성명에 핵 개발이 자위적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열린 ARF에서 의장성명에 '엄중한 우려'라는 표현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ARF를 계기로 회원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당시 의장국이었던 필리핀이 아세안 대표로 만나 북핵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오는 3일 ARF 참석차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6개국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또한 리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미 간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ARF 의장성명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우려'보다는 비핵화 움직임에 대한 '환영'과 '지지' 입장이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의장성명에 들어간 CVID 표현을 재확인하며 '완전한 비핵화(CD)'에 대한 지지입장을 담은 '미래 방향'에 대한 지지입장을 담은 '지지성기'가



농특산물 대축제 공청회

무주군은 2일 제4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관련 주민공청회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관련기사 9면>

## '계엄문건 작성TF 비밀리 운영'

###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수사 진행상황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을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로 하고, 사무실도 별도 장소를 사용하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령 문건의 본래 제목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으며, 문건 작성 후에는 PC 등을 포맷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계엄 문건 수사와 관련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한 뒤 계엄문건 작성 TF에 참여한 간부와 요원 등 2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당초 언론 등에 공개된 계엄문건 보고서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안' TF라는 계엄령 검

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름으로 TF를 만들었다.

TF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출범했으며, 소강원 당시 3차장(현 참모장·육군 소장)이 총 책임자였다. 기무진 당시 수사단장(현 5차장·육군 준장)의 지휘 아래 두 조로 나뉘어 8장 분량의 계엄문건(3명) 및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11명)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TF에 참여하는 간부와 요원들의 인사명령도 허위로 발령했고, 관련 예산도 허위로 책정해 집행했다. 사무실도 별도 장소를 확보해 운영하는 등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건 작성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문건 작성에는 기무사 내부망과 분리된 컴퓨터를 이용했다. TF 운영이 끝나고 해산할 때는 사용된 전자기기도 모두 포맷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특수단의 설명이다.

특히 특수단은 확보한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를 복구하는데 성공,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 1면에 이어... '기무사, 해체 수준 재편성'

장영달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혁TF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 왔다.

개혁TF는 당초 지난 7월 중 최후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다시 개혁안 발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개혁TF가 이날 확정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입법하는 한편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 국방부 직할본부로 두는 방안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기무사 개혁안은 빠져 있었다. /뉴시스

### 도, 신임 감사관에 박해산 부이사관

박해산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감사관(55)이 전북도 신임 감사관에 임명됐다. 전북도는 박웅준 감사관의 후임으로 박해산 감사관을 8일자로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남원출신인 박 감사관은 7급으로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사회복지 감사국 부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 정동영 "공공부문 축소, 경제 살릴 해법 아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은 공공부문 축소가 아니다"라며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며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리한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실업,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공공부문 축소' 주장을 정면으로 비



노동자들은 다시 자영업에 내몰리고,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민들은 촛불 시만혁명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저지른 정경유착과 재벌 중심 경제구조, 정부의 공공성 훼손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해내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라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시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킨 지난 보수정권 10년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평화당 강령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민주평화당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